

K-SDGs 세부목표 및 지표 초안에 대한 산업계그룹 입장보고서

1. 총평

1) K-SDGs 이행과정에서의 산업계 역할

- 산업계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체 중의 하나로서,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(이하 K-SDGs)의 수립을 통해 곧 다가올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은 삶의 질을 높이고 2030년까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사회발전을 구현하고자 하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지지함
- 저성장과 급격한 노동대체 기술의 발전, 자원·에너지시장의 가변성 등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가득한 오늘날의 경영환경에서, K-SDGs 체계는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용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
- 또한 K-SDGs는 대내외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회책임 스탠더드를 준수하기 위한 지속가능경영 기본 프레임워크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
- 이에 산업계는 기술혁신과 기업가정신(entrepreneurship)을 발휘하여 자원 효율성 및 지속가능한 경제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, 정부-협력사-지역공동체 등 기업 주요 이해관계자와 함께 미래지향적 환경·사회가치를 견인함으로써 K-SDGs 달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에 기여하고자 함

2) K-SDGs 수립 방향성에 대한 산업계 기본입장

- 산업계그룹이 『K-SDGs 세부목표 및 지표체계』 초안을 검토한 결과, K-SDGs 민·관·학 작업반이 초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UN

SDGs와의 정합성(alignment)을 고려하되 국내 상황에 맞는 특색을 반영하고자 많은 고민의 흔적을 보였다고 평가됨

- 특히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평적으로 수렴 및 통합하는 consensus-building 절차를 중시하고, 지속가능발전 이슈들의 다분야적(cross-cutting) 특성을 감안하여 이슈별 연계성 강화를 위한 Nexus Approach를 통해 향후 K-SDGs의 효과적 이행을 제고하고자 시도한 점을 높이 평가함

○ 산업계그룹은 K-SDGs 체계가 아래의 원칙과 방향성에 기반하여 수립될 것을 제안함

○ **첫째, 기존 법률 및 정부의 국정과제와의 정합성**

- K-SDGs 각 항목들이 기존 법률과 정부의 정책과제와 연계하여 수립된다면 더 큰 추진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, 관련법의 정비에 도움이 될 것임

- 일례로, '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사회적 책임 강화' 국정과제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(stewardship code), 산업발전법 내 지속가능경영 촉진을 위한 종합시책 등 관련법과의 논조를 같이 하여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K-SDGs의 산업계 관련 목표들을 효과적으로 이행 및 관리하는데 있어 중요함

○ **둘째,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정량화된 지표 설정**

- 지표 설정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정량 목표 위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, 대외적으로도 공개될 수 있는 수치를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함

※ Ex) 관리되지 않는 데이터 혹은 기업 영업기밀 데이터 지양

- 지표의 수가 너무 많을 경우 이를 관리하기 위해 과도한 행정 노력과 비용이 투입되므로,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관리가 필요함

※ Ex)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(NDC) 등 국가 상위 목표가 존재하여 이미 해당주체가 상위 지표에 따른 이행의무를 갖고 있을 경우,

K-SDGs 내 관련목표에 대한 既 수립된 상위 지표를 적용하고 추가
적 하위 지표 설정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함

- 셋째, 산업계의 지속가능발전 기술혁신 신규투자 및 국가 미래 성장엔진
신산업을 촉진할 규제개혁 및 지원책
 - 유엔 SDGs가 제도개혁 등 구조변화 혁신을 강조하고 있듯이, 산업계의
지속가능발전 비즈니스 솔루션 및 혁신기술이 시장에 안착하여 사회 전
분야에 Scale-up되기 위해서는, 시장을 왜곡시키는 구조적 장애 해소 및
제도적·규제적 개혁이 선행되어야 함
 - 향후 K-SDGs 세부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과제 수립 및 예산 편성 시,
산업계의 신규투자 및 비즈니스 해법을 확대할 수 있는 규제 환경 조성
및 지원책 마련이 비중 있게 검토될 것을 제안함

2. K-SDGs 세부목표 및 지표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

SDG 2. 기아 종식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

2-d. (세부목표) 적정량의 재료 사용과 균형잡힌 식단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음식물쓰레기 감축을 위해 노력한다

현황 및 문제점

- 목표와 세부목표 항목(음식물쓰레기 감축) 간 연관성이 낮음

개선 의견

- 세부목표 중 '음식물 쓰레기 감축' 관련 내용은 SDG 12-3 (식품 손실, 식품 폐기물)으로 이동

(세부목표 추가) 농가의 동물복지 개선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를 구축한다

현황 및 문제점

-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살충제 계란, AI,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 먹거리 안전과 동물의 권리 보호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
- 살충제 주사, 학대, 수면권 박탈 등 동물복지 및 안전한 식량을 위협하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농업을 개선할 세부목표 및 지표 설정 필요

개선 의견

- ‘농가의 동물복지 개선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보급체계를 구축한다’는 내용의 세부목표 추가
- 추가된 세부목표를 측정할 하기 지표 추가
 - 동물복지 인증 농장 수, 동물복지 인증 제품 비율
 - ※ 육계의 경우 1m²당 19마리 이하의 공간에서 매일 최소 6시간 이상 소등으로 수면권을 보장한 농가에 한해 인증 조건 확보

SDG 3. 모든 연령대에서 건강한 삶과 웰빙 보장

3-1. (세부목표) 만성질환의 위험요인관리와 건강보장의 확대

(지표) 30-70세 사이에서 심혈관질환, 암, 당뇨병, 또는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, 사망률; 자살률(고의적 자해에 의한 사망)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되는 인구의 비율, 재난적인 의료비 자부담으로부터 보호받는 가구의 비율

현황 및 문제점

- 세부목표(만성질환, 건강보장)와 지표(자살률) 연관성 모호

개선 의견

- 지표 중 ‘자살률’ 삭제
 -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라도 인과관계 불명확

3-4. (세부목표) 감염병 예방 및 관리

(지표) 결핵발생률(인구10만명당 발생건수), B형간염 양성률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지표로 특정된 결핵, 간염 이외 신종 전염성 질환(ex. 고령화, 기후 변화 등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신종플루), 에이즈,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 등 추가적 지표 관리 필요

□ 개선 의견

- 지표에 ‘비감염인구 ○○당 에이즈 감염자(HIV/AIDS)의 수’, 기타 신종 전염성 질환 감염자의 수,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 감염자의 수 등 추가

3-6. (세부목표) 아동 건강보호 및 건강증진

(지표) 영아사망률, 5세이하 유아 사망률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사회적 약자인 아동/청소년 대상 가정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으며,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및 관리가 필요
- 입시스트레스 및 학교폭력 등에 따른 청소년 신체/정신적 건강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 및 체계적인 관리 지표 필요

□ 개선 의견

- 세부목표를 ‘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폭력 근절’로 수정
- 지표에 ‘아동학대’, ‘가정/학교폭력 비율’ 추가
※ 청소년 자살률,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결과,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(2017,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)

SDG 4. 교육

4.4. (세부목표) 직업교육훈련을 필요로 하는 모든 계층의 수요자들에게 양적, 질적으로 적합한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

- 취업과 창업 등에 필요한 직무역량을 가진 청소년, 성인 등(구직자 및 재직자 포함) 비중을 높인다

(지표) 직업교육훈련 참여자 수, ICT 산업·직종 종사자 수

현황 및 문제점

○ 지표를 보다 구체화하여 목표와 지표 간 연관성 제고 필요

개선 의견

○ 직업교육훈련 참여자 수 : 연령별, 성별 세분화

○ ICT 산업·직종 종사자 수 : 산업·직종별 세분화

4.5. (세부목표)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, 장애인, 선주민,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

(지표) 모든 교육 지표에 대한 형평성 지수 산출

현황 및 문제점

○ 평등한 접근권의 대상에 '학교 밖 청소년'을 추가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관리 실적 측정 필요

개선 의견

○ 지표에 '학교 밖 청소년 교육훈련 실적' 추가

4-7. (세부목표) 세계시민교육의 증진 및 확산

(지표) 세계시민교육이 (a)국가교육정책, (b)교육과정, (c)교사교육, 그리고 (d)학생평가 등 모든 영역에서의 주류화되어 있는 정도

현황 및 문제점

○ 지표 중 '주류화되어 있는 정도' 정의 모호

개선 의견

○ 지표 중 '주류화되어 있는 정도'에 대한 구체화 필요
-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'집계 수' 등 정량화 가능한 표현으로 대체

4-a, 4-b, 4-c.

현황 및 문제점

○ 4-a, 4-b, 4-c 각 세부목표가 '직업교육'에 국한되어 있으며, 교육의 목표를 경제활동에 제한하고 있어 폭넓은 적용이 필요

개선 의견

○ 세부목표 4-a, 4-b, 4-c의 '직업교육훈련'을 '교육'으로 변경

SDG 5. 양성평등

5-2. (세부목표) 인신매매, 성적 착취 및 기타 형태의 착취를 포함하여, 모든 여성과 여아에 대한 공적·사적 영역에서의 모든 형태의 폭력 철폐

(지표) 지난 1년간 부부폭력비율,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

현황 및 문제점

- 설정된 지표가 피해 여성만을 다루고 있으므로, 여아에 대한 범죄비율 지표 추가 필요
-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내 성범죄 신고율을 지표로 추가 검토 필요

개선 의견

- 지표에 ‘(여)아동 대상 성범죄 비율’ 추가
- 지표에 ‘사내 성범죄 신고건수 (혹은) 신고조사 조치건수/조치비율(%), 남,녀구분’ 추가

5-4. (세부목표) 무보수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한 인정 및 가치 부여
(지표)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의 성별, 연령별, 장소별 비율; 육아휴직사용 성비

현황 및 문제점

- 지표 중 하나인 ‘육아휴직사용 성비’만으로는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 지표로 부족

개선 의견

○ 지표에 ‘육아휴직 사용자’, ‘육아휴직 후 복직률(남여 구분)’ 추가

5-5. (세부목표) 정치·경제·공적 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및 리더십을 위한 평등한 기회 보장

- 1) 여성의 성적 주체성 확립을 위한 성인지적 성교육 강화
 - 2) 계획 임신과 안전한 성생활을 위한 피임 및 관련 상담과 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
 - 3) 안전한 임신중절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의료적 접근 강화를 통한 여성의 건강권 보장
 - 4) 여성의 성·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법·제도 전반에 대한 체계적 개선
 - 5) 성·재생산 건강 및 권리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와 점검 실시
 - 6) 성과 재생산에 대한 부정적이고 편견적인 사회적 인식 개선
- (지표) 의회와 지방의회의 여성 비율, 공공부문 여성 관리직 비율, 기업 여성 관리자 비율, 학교 성교육 만족도, 성적 자기결정권, 피임 실천, 미혼자의 성관계 경험, 성건강 관련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경험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세부목표 중 1)~6)은 ‘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및 리더십을 위한 평등한 기회 보장’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수립해야 할 이행과제에 더 적합
- 지표 중 일부(학교 성교육 만족도, 성적 자기결정권, 피임 실천, 미혼자의 성관계 경험, 성건강 관련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경험)는 목표와 연관성이 부족

□ 개선 의견

- 세부목표 중 1)~6) 삭제
 - 1)~6)은 향후 이행과제 수립시 검토
- 지표 중 ‘학교 성교육 만족도, 성적 자기결정권, 피임 실천, 미혼자의 성관계 경험, 성건강 관련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경험’ 삭제

5-a. (세부목표) 국내법에 따라 여성에게 경제적 자원에 대한 평등한 권리 및 토지와 기타 형태의 자산 소유와 통제, 금융서비스, 유산 및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을 부여하기 위한 개혁을 단행

(지표) (a) 농지에 대한 소유 및 소유권을 보장받는 전체 농업인구 비율(성별 분리); (b) 총 토지소유자 중 여성 토지소유자(토지권 종류별); (관습법을 포함한) 법적근거를 통해 여성의 토지소유 또는 통제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 수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설정된 지표에 토지에 대한 지표만 있고, 그 외 자산/자원에 대한 소유 및 접근성을 평가할 지표가 없음

□ 개선 의견

- 지표에 ‘주택 등 자산 평가’ 추가

5-b. (세부목표) 여성의 권한 강화를 위하여 핵심기술,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진

(지표) 휴대폰 보유율(성별 및 연령), 여학생 이공계 진학률, 이공계

여성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한국의 경우, 휴대폰 보유율이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이므로 여성의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진을 위한 대표적인 지표로 기능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(변별력 부족)

□ 개선 의견

- 지표 중 '휴대폰 보유율(성별 및 연령)' 삭제
-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진에 대한 여성 권한 강화 차원에서 현실성에 더 맞는 '데이터 이용추이'(성별 및 연령별) 지표로의 대체 검토

SDG 6. 깨끗한 물과 위생

6-2. (세부목표) 2030년까지,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필요에 주목하면서,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모두를 위한 충분하고 공평한 양질의 하수도서비스를 제공한다

(지표) 농어촌 공공 하수도 보급률, 개인하수도 공공관리 비율, 하수 악취저감률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일부 산간, 해안 지역에 식수 부족을 겪고 있는 지역이 여전히 존재하며,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필요
- 취약지역의 물 고갈을 고려하여, 취약지역 내 용수 사용 원단위 (Water intensity) 지표 추가 검토

□ 개선 의견

- 세부목표 내 '식수 접근성' 추가
- 지표에 '식수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의 인구비율' 추가
- 지표에 '취약지역 내 용수 사용 원단위(Water intensity)' 추가

6-3. (세부목표) 2030년까지 물순환 개선 및 물 재이용 활성화, 오염 감소,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질 방류 최소화를 통해 수질 대폭 개선과 수생태계 건강성을 제고한다

(지표) 하수처리수 재이용율, 상수원 수질 좋음(I) 등급(BOD, 총 인 기준) 달성 비율, 전국 수체의 수생태계 건강성 양호(B) 등급 비율, 국민 물환경 체감 만족도 달성률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생태계 건강성 제고를 위반 시, 체계적인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오염자 처벌 강화 필요

□ 개선 의견

- 세부목표 혹은 향후 이행과제 수립 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염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 추가

6-a. (세부목표) 2030년까지 집수, 담수화, 용수효율, 폐수 처리, 재활용 및 재사용 기술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의 물 및 위생 관련 활동과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협력과 역량강화 지원을 확대한다

(지표) 정부 주도의 지출 계획의 일부인 물 및 위생 관련 공적개발 원조 금액

현황 및 문제점

- 지표 내 ‘공적개발원조 금액’에 수자원개발이나 담수 등 사업과 기술적 지원도 포함시켜 국제협력 범위 확대 필요

개선 의견

○ 지표 내 물 및 위생으로 한정되어 있는 공적개발원조 금액에 ‘수자원개발이나 담수 등 사업과 기술적 지원’도 포함

SDG 7.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

7-3. (세부목표) 2030년까지 국가 에너지원 구성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%로 증대

(지표)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, 1차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, 최종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

현황 및 문제점

- ‘재생에너지 3020’과의 통일성 필요

개선 의견

○ 지표 중 ‘1차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’, ‘최종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’ 삭제

(목표 7 전반)

추가 검토 필요

- 재생에너지 외 신에너지(수소, 연료전지, 석탄액화가스 등)에 대한 고려 여부 검토

SDG 8.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

8-4. (세부목표) 자원효율 향상을 통해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파괴 비동조화

(지표) 물질 발자국, 국내 물질 소비량

현황 및 문제점

- 세부목표 중 ‘경제성장에 따른 환경파괴 비동조화’라는 문구가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에 쉽지 않은 용어임

개선 의견

- 세부목표 중 ‘경제성장에 따른 환경파괴 비동조화’문구를 UN SDGs와 유사하게 ‘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훼손 억제’ 등으로 수정 검토

8-5. (세부목표)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동일노동-동일임금 달성

(지표) 비농업부문에서의 비공식 성별 취업 비율, 남녀별 평균임금과 실업률

현황 및 문제점

- 세부목표 ‘동일노동-동일임금’ 달성을 위한 지표로 ‘남녀별 평균임금과 실업률’은 부족하므로 지표의 현실화 필요

□ 개선 의견

○ 지표에 '비정규직, 정규직 비율' 추가

8-8. (세부목표)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 증진

(지표) 산업재해 발생 비율(성별 및 이주신분별)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근로자의 안정적 근로환경을 측정할 지표인 산업재해 발생 비율을 성별 및 이주신분별로 구분해야 하는 필요성 낮음
- 사후적인 산업재해 발생 외에 사전예방 차원에서 '안전관리교육 이수율' 등 추가 검토

□ 개선 의견

- 지표 내용 중 '성별 및 이주신분별' 구분을 '고용형태' 혹은 '사업장 규모'에 따른 발생 비율로 대체
- 지표에 '안전관리교육 이수율' 추가

(목표 8 전반)

□ 추가 검토 필요

-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통한 포용적 경제성장에 대한 고려가 목표 8에 미반영
 -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과공유제 확산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공유제 참여율 등의 검토 필요
- 청년 일자리 외 타 취약계층(ex. 고령화에 따른 노년층 일자리, 여성

고용률)에 대한 고려가 목표 8에 상대적으로 미흡

SDG 9. 산업 · 혁신 · 인프라

9-1. (세부목표) 다수가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고, 경제성장과 인간의 복리를 지원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시설 구축

(지표) 고속도로 접근성, 가구당 소비 중 교통 이용 소비 비중,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

현황 및 문제점

-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과공유제 확산노력 평가 필요

9-5. (세부목표)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 활동과 기술혁신을 통해 자원효율성이 높고 안전한 기술과 산업화 추구

(지표)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

현황 및 문제점

- 지표인 ‘이산화탄소 배출량’은 SDG 13(기후변화)에서 관리되어야 할 지표이며, 세부목표 9-5에서 주 목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‘자원 효율성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낮음

개선 의견

- 지표 ‘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’을 ‘부가가치 단위당 폐기물 발생량’, ‘부가가치 단위당 물 사용량’으로 대체

SDG 10. 불평등 완화

10-2. (세부목표) 2030년까지 나이, 성별, 장애여부 혹은 여타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사회·경제·정치적 포용을 강화 증진한다
(지표) 소득격차비율(또는 빈곤격차비율), 소득 5분위 배율, 인구집단별(성, 연령대, 장애유무 등) 빈곤율

현황 및 문제점

-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다문화 가정 및 이주자를 위한 정책 및 사회적 지원을 통해 소수자들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평등 달성

개선 의견

- 지표 ‘인구집단별 빈곤율’을 성, 연령대, 장애유무로 구분하는 것 외에 ‘다문화 가정, 이주자’구분 추가

SDG 11. 지속가능한 도시 · 공동체

11-3. (세부목표) 2030년까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화를 확대하며 주거지에 대한 참여적, 통합적, 지속가능한 계획과 관리 역량을 강화
(지표) 시가화지역 충진율(%), 시민참여 도시계획사업 예산율(%)

현황 및 문제점

- 저소득층 원주민의 주거/상업권을 위협하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응으로 도시·공동체 보존의 기틀 마련 필요

- 지표 중 ‘시가화지역 충진율(%)’은 부적절
 - 도시밀집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부작용 초래 가능하므로 도시재생과 시민참여형 사회적기업/협동조합 등의 육성과 관련 있는 지표 추가 필요

□ 개선 의견

- 세부목표에 ‘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활동’ 추가
- 지표 중 ‘시가화지역 충진율(%)’을 삭제하고, 도시재생과 시민참여형 사회적기업/협동조합 등의 육성과 관련 있는 지표로 대체

SDG 12. 지속가능한 생산 · 소비

12-4. (세부목표) 화학물질과 유해폐기물의 친환경적 관리를 통한 인간의 건강보호와 환경오염 예방
(지표) 화학물질 관련 국제환경협약 참여 당사자 수와 유해폐기물 발생량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지표인 ‘화학물질 관련 국제환경협약 참여 당사자 수’와 세부목표 간 정합성 모호

□ 개선 의견

- 지표 중 ‘화학물질 관련 국제환경협약 참여 당사자 수’를 ‘국가 화학물질 등록비율(물량기준)’, ‘국가 화학물질 등록 기업 수’로 대체

12-6. (세부목표) 지속가능경영 활동 노력과 성과 및 계획을 투명하게 보고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 수 파악 및 발간 기업 확대

(지표)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수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지표인 발간 기업수 외에 정기적으로 발간 여부 또한 확인 필요

□ 개선 의견

- 지표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수 외에 정기적으로 발간 여부 또한 확인 필요

SDG 13. 기후변화

13-1. (세부목표) 국내 모든 곳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해 예상되는 자연재해에 대해 위험수준(critical level)을 이상으로 회복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

(지표) 지역 기반의 상대적 연평균 인명피해, 재해피해액, 피해복구액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세부목표 중 위험수준(critical level)은 정의와 측정 또는 예측의 어

려움과 정확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을 제안하며, UN SDGs에서는 ‘Resilience and adaptive capacity to climate-related hazards and natural disasters’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‘위험과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 및 적응 능력’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

□ 개선 의견

○ 세부목표 ‘자연재해에 대해 위험수준(critical level)을 이상으로 회복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’를 ‘위험과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 및 적응 능력을 강화한다’로 수정

13-2. (세부목표)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를 국가 및 지방 정책, 전략, 계획에 통합한다

(지표)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;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 비율/탄소포인트 지급액; 자연재해 피해;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기후변화 대응대책 수립비율/이행률;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기후변화 대응 총예산(예산비율); 민간기업 기후변화 대응대책 수립건수 및 이행실적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파리협정을 통해 제출한 국가기여방안(NDC)에 명시된 감축 목표는 국제사회에서의 약속이므로, ‘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’ 관련 내용의 지표 추가 필요
- 지표 ‘민간기업 기후변화 대응대책 수립건수 및 이행실적’은 ‘기후변화 대응대책 수립 민간기업 수’로 현실화 필요
 - ‘민간기업 기후변화 대응대책 수립건수 및 이행실적’은 더 상위 지표인 13-3 ‘기업 온실가스 감축 참여’ 지표 혹은 최종지표인 ‘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’으로 대체 가능

- 지표 ‘자연재해 피해’는 세부목표 13-1의 ‘재해피해액’ 지표와 중복되므로 삭제 요함

□ 개선 의견

- 지표에 ‘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’ 추가
- ‘민간기업 기후변화 대응대책 수립 건수 및 이행실적’은 ‘기후변화 대응대책 수립 민간기업 수’로 수정
 - (혹은) 더 상위지표인 13-3 ‘기업 온실가스 감축 참여’ 지표나 최종지표인 ‘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’으로 대체
- 지표 ‘자연재해 피해’ 삭제

13-3. (세부목표) 기후변화 완화, 적응, 영향 감소, 조기 경보 등에 관한 교육, 인식제고, 인적·제도적 역량을 강화한다

- 기후변화에 관한 인식을 고취하고 저탄소생활을 확산한다
-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관련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
-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업 참여를 독려한다

(지표)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고취와 저탄소 생활 확산, 기후변화 완화 및 감축 교육, 기업 온실가스 감축 참여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세부목표 중 ‘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기업 참여를 독려한다’와 관련 지표 ‘기업 온실가스 감축 참여’는 상기의 13-2에서 ‘기업 온실가스 감축 참여’ 혹은 ‘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’지표로 대체할 것을 이미 제안한 바, 13-3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

- 대신, 기업만이 온실가스 감축의 주체가 아니므로, 기업, 가정, 자치단체, 정부 등을 아우를 수 있는 ‘모든 조직’이라는 용어를 활용하여 ‘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모든 조직의 참여를 독려한다’로 수정 필요

□ 개선 의견

- 세부목표 중 ‘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업 참여를 독려한다’를 ‘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모든 조직의 참여를 독려한다’로 수정
- 지표 중 ‘기업 온실가스 감축 참여’를 삭제 혹은 ‘모든 조직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’로 대체

SDG 16. 거버넌스 (평화, 인권 및 민주주의)

16-11. (세부목표) 정보인권 보호 조치를 수립하고 시행한다.

- **16.11.1.**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 확립
- **16.11.2.**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
- **16.11.3.** 개인정보 자기정보통제권의 강화
- **16.11.4.** 전자감시사회에 대응하여 반감시권의 강화
- **16.11.5.** 빅데이터 시대에 바이오정보 활용에 대한 근거 확립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결과 반영을 위해 지표 추가

□ 개선 의견

○ 지표에 '개인정보보호 목표달성률' 추가